

## 생명안전기본법안

(박주민의원 · 용혜인의원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79
----------	------

발의연월일 : 2025. 3. 10.

발 의 자 : 박주민 · 용혜인 · 한창민  
권향엽 · 박희승 · 김 윤  
차지호 · 박지원 · 박정현  
박해철 · 김우영 · 윤준병  
이용선 · 임미애 · 장철민  
이재정 · 민병덕 · 김문수  
김남희 · 황명선 · 허성무  
이용우 · 추미애 · 박홍근  
김종민 · 서미화 · 전종덕  
남인순 · 박은정 · 정동영  
채현일 · 정춘생 · 박지혜  
김정호 · 이정문 · 김 현  
이수진 · 장종태 · 김선민  
송옥주 · 신장식 · 이해민  
이연희 · 강준현 · 백선희  
김재원 · 김준혁 · 이광희  
손명수 · 김준형 · 김예지  
김영환 · 소병훈 · 김영배  
윤종오 · 위성곤 · 김남근  
강경숙 · 황운하 · 송재봉  
전진숙 · 이학영 · 고민정  
장경태 · 윤종균 · 진성준

이재강 · 정준호 · 김한규  
김영호 · 한정애 · 김기표  
박홍배 · 임호선 · 서왕진  
김동아 · 강득구 의원  
(77인)

##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

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함(안 제3조).

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짐(안 제4조).

라.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등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및 수습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적·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별도

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8조).

아.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0조).

## 생명안전기본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안전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안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및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나.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  
자매 및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

라. 안전사고의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마. 안전사고의 목격자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바. 그 밖에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안전약자”란 신체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

나. 노인

다. 아동

라. 임산부

마. 환자

바. 노숙인 등

사. 저소득층

아. 다문화가족

자. 이주민

차. 한국어 사용이 원활치 아니한 사람

카. 공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타.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안전권)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

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피해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각 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3.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5.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6. 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7.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8.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치유휴직 및 재취업지원·고용유지지원·이동지원·주거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9.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수습을 요구할 권리

10. 사고원인과 국가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

11. 안전사고 및 그 대응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있는 주체에 대하여 처벌 등 적절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배상 및 보상 등 피해자 구제를 받을 권리
13.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14.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15.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16.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제6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안전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등은 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국가등은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지침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소통·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제공 등 각종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련 수사 및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 ① 기업 및 단체 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등의 안전 관련 정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및 단체 등은 안전사고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업 및 단체 등은 안전사고 발생 및 수습현장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생명안전정책위원회) ①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생명안전정책위원회(이하 “생명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명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0조에 따른 생명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안전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권 증진, 피해자 권리의 보장, 안전약자의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안전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⑤ 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생명안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안전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생명안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명안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권 보장 목표와 방향
2. 안전권 보장을 위한 안전정책의 기본 방향
3.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정비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업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사항
6. 안전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9. 안전권 증진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0.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조사, 기억과 추모 및 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생명안전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안전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2조(안전 재정 및 인력 확보 의무) ① 국가등은 안전 관련 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인력 및 재원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한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등

제13조(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①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안전관련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련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관련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① 국가등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반적인 안전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관리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시·도별 및 시·군·구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의 실시 시기, 내용 및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영향 분석·평가) ① 국가등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등

제16조(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서 정하는 각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차별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기간과 범위·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구제절차와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공개)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와 관련된 감사원·조사기구 등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서
2. 안전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의 명칭·소재지·안전사고원인·재발방지대책·피해지원과 회복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 물질 취급 및 노출에 관한 정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하며 권고안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조사기구(이하 “독립조사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독립조사기구는 예산 및 인사 등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④ 국가등은 독립조사기구가 발표하는 조사결과 및 정책개선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독립조사기구의 조직, 구성, 조사의 대상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9조(기억과 추모)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기억과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기억과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공원·추모기념관·조형물·상징물·봉안시설 등을 포함한 추모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조성



2.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을 통한 전시·출판·연구·학술  
및 문화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3. 현장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사업

4. 교육·체험관의 설립

5. 기념일의 지정

6. 그 밖에 기억과 추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억과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을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등은 제3항의 재단 등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에 필요한 지원조직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동체 회복)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공동체의 심리적 안정·동질성 유지·공동체 정신 및 신뢰의 회복·재난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을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재단 등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에 필요한 지원조직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국가등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체계의 확립 등) ① 국가등은 안전약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약자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안전약자와 피해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것

2. 안전약자와 피해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

제23조(피해자 정보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피해자 및 안전약자에 대한 지원,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개 등 관련 업무에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 및 안전약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